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Handbook

단 원 용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8년 경제성적표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의 정책제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Handbook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8년 경제성적표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의 정책제안

발행인 김종인

발행일 2016.03.

편집인 강철규·정세균

발행처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9 동우국제빌딩 8F
02-2630-0173

인사말

더불어성장 핸드북을 발간하며

제 1 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새누리당 집권 8년의 경제 성적표

국민 경제	새누리당 8년, 팍팍해진 국민 살림	08
정부 운영	나라 살림, 이렇게 해도 되나?	16
평화 경제	평화의 쪽박을 깨다	24

제 2 부

더불어 성장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가 답이다.

더불어 성장론	정의와 풍요가 함께 하는 더불어 성장	28
청년경제 활성화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30
비정규직 차별 철폐	차별과 불안이 없는 직장 만들기	32
자영업 활성화	열심히 일하고 공정하게 대우받기	34
서민경제 활성화	서민도 살만한 나라를 위해	35
여성경제 활성화	여성을 마음껏 일하게 하라	37
미래산업 선점	오늘 준비해야 미래를 선점한다	38
혁신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이 미래의 희망이다	39
대·중소기업 균형 발전	조화로운 기업 생태계를 위해	40
제2차 국토균형발전	모든 지역이 더불어 잘사는 상생 발전	42
한반도 신경제지도	평화가 밥이다	43
도농 상생	도시를 건강하게, 농촌을 풍요롭게	44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새 3월이 되어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수출은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고, 가계부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삶은 외면한 채 안보 논리로 경제실정을 가리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불평등심화와 경기침체’만을 낳는 현 정부의 낡은 정책을 극복하기 위해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면서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더불어 성장론’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더불어성장론에 입각한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이 제시한 ‘더불어성장론’ 및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은 현 정부의 실정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며 저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시대에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우리 당이 제안한 ‘더불어 성장론’을 비롯한 경제정책들은 관심있는 언론과 국민들의 호평과 지지를 받았지만, 아직 그 의의와 구체적인 내용이 널리 확산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발간하는 ‘더불어성장 핸드북’은 우리 당의 경제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성장 핸드북’은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 당원 여러분들이 홍보를 하는데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은 우리 당의 실력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장 핸드북’은 우리 당이 유능한 경제정당이며, 대안적 수권정당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당원여러분께서는 이 핸드북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알리면서 동시에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이 있음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안적인 유능한 수권정당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승리를 위한 당원여러분들의 전투를 빌며 당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



더불어성장론 핸드북을 발간하며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 강철규, 정세균입니다.

2016년 새해는 열렸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무겁기만 합니다. 시장에 가면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는 한숨으로 가득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2.6%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에도 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적 양극화 문제입니다. 대기업은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도 투자와 고용에 인색한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계층 간 갈등으로 불거지고 있는 금수저-흙수저 논란 또한 이미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대한민국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신화를 써내려왔던 어르신세대는 빈곤과 소외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청년세대들은 N포세대라며 우울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장의 방향과 정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세계적 경제학자들은 낙수효과에 근거한 기존의 성장론이 “불평등할 뿐 아니라 성장을 견인하지도 못하였다”며 ‘불평등 해소’를 통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포용적 성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이 준비한 ‘더불어 성장’은 이러한 국제적 합의에 입각한 성장모델입니다. ‘더불어 성장’은 한마디로 ‘분배나 성장이나’의 이분법을 넘어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이며,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성장전략입니다.

그간 우리 당은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국민들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이러한 차가운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유능한 정당,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번에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내놓은 ‘더불어성장론’은 우리 당의 총선공약을 넘어 수권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 중산층과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
강철규, 정세균 드림

제1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 새누리당 집권 8년의 성적표

국민 경제

새누리당 8년,
팍팍해진 국민 살림

- 경제성장
- 종합주가지수
- 국민소득
- 가계부채
- 실질임금
- 최저임금
- 농가소득
- 청년일자리

정부 운영

나라살림,
이렇게 해도 되나?

- 국가채무
- 재정수지
- 정부채무순위
- 조세
- 지방재정
- 지방채무
- 정부 효율성 순위
- 정부 정책 투명성 순위

평화 경제

평화의
쪽박을 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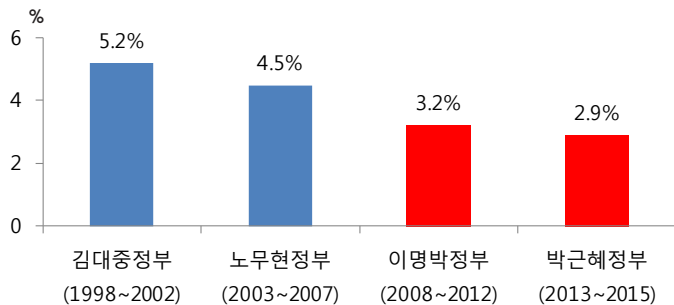
- 남북-북중교역
- 인도적 교류
- 평화 안보

1 경제성장

새누리당 8년, 경제만은 잘한다고 했었는데?

민주정부 10년(1998~2007)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8%였다. 이 성장률을 두고 새누리당은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 말했다. 새누리당 8년(2008~2015)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1%. 민주정부 연평균 경제성장률의 2/3도 안 된다. 새누리당의 기준대로라면, 가히 ‘경제를 말아먹은 8년’이라 하겠다.

정부별 연평균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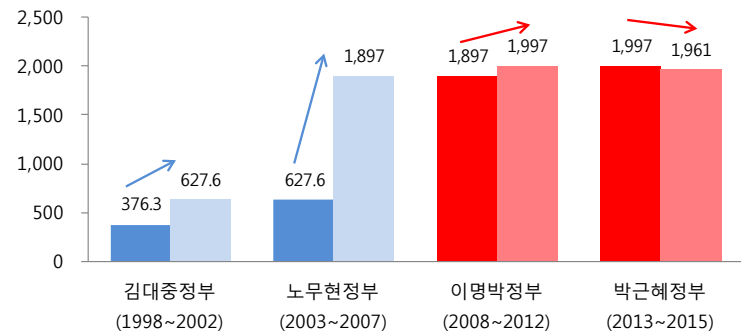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010년 기준(연쇄가격, 2008 SNA)

2 종합주가지수

새누리당 8년, 주가는 게걸음 치다.

주가지수는 경제의 활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다. 민주정부 10년간 종합주가지수는 376.3에서 1,897로 무려 5배나 뛰었고 2,000을 돌파했었다. 한마디로 ‘대박의 시대’였던 것이다. 새누리당 8년을 통틀어 종합주가지수는 겨우 63포인트 올랐다. 민주정부 10년간 1,521포인트가 오른 것을 생각하면, 가히 ‘게걸음의 시대’를 넘어 ‘쪼박의 시대’라 하겠다.

정부별 종합주가지수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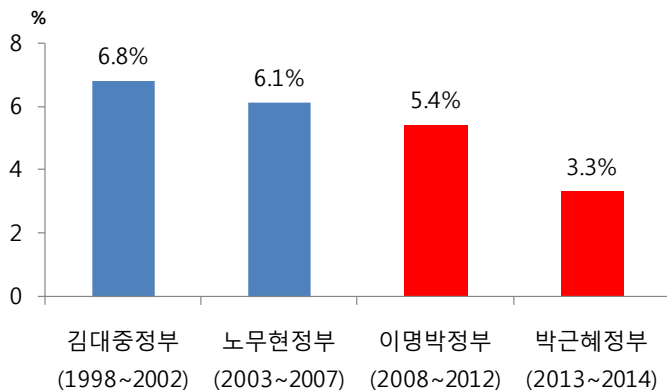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3 국민소득

박근혜 정부, 국민총소득 증가율을 반토막 내다.

민주정부 10년(1998~2007) 동안 우리 국민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연평균 6.4% 늘어나 거의 두 배가 되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7년(2008~2014)간 연평균 증가율은 4.8%로 줄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3%대로 주저앉았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소득 증가율마저 반토막 낸 것이다.

정부별 연평균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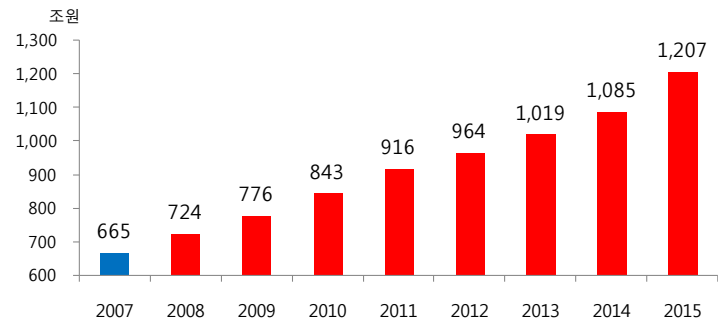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010년 기준(2008 SNA)

4 가계부채

빚 권하는 새누리당 정부 8년 만에 가계부채, 2배가 되다.

빚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하지만, 새누리당 8년간 우리 가계의 빚은 늘어도 너무 늘었다. 먹고 살기 팍팍해서 빚지고, 건설경기 부양한다고 집사라 권해서 빚을 지다 보니, 가계부채만 늘어나고 있다. 2007년 약 665조원이었던 가계부채는 2015년 1,207조원으로 1.8배가 되었고, 1인당 1,370만원이던 빚은 2,385만원으로 늘었다. 우리 국민은 빚 권하는 정부와 살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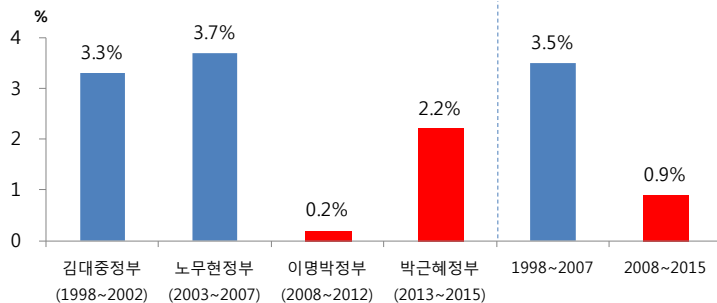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5 임금

가계부채는 두 배인데, 월급 인상률은 반의 반토막

이명박 정부는 국민성공시대를,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하였다. 성공과 행복, 얼마나 좋은가. 사실 국민이 뭐 그리 크게 바라던가. 그저 월급 좀 많이 오르고 마음이라도 편하면 성공이고 행복 아닌가. 민주정부 시대에 비해 빛이 두 배로 늘어 마음은 불편한데, 실질임금 상승률은 1/4토막이 났다. 임금 인상을 줄이는 새누리당 정부. '줄푸세'의 '줄'이 '실질임금 상승률 줄이기'였나 보다.

연평균 실질임금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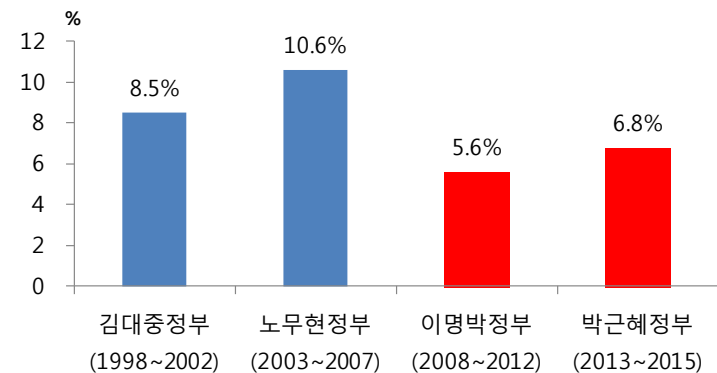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통계
주: 전산업 상용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 상용근로자 총임금

6 최저임금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최저임금 상승률도 줄었네.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 식당 일하는 아주머니들, 몸 하나가 밑천인 이웃들이다. 한 달에 100만원 남짓 버는 이 분들에게 그래도 비빌 언덕은 최저임금. IMF 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 2002년 카드 위기를 겪은 노무현 정부지만 그래도 서민과 청년들의 몫인 최저임금 인상에는 인색하지 않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마저도 줄이고 있다. 국민성공과 국민행복 시대의 새누리당 정권에서 서민과 청년은 국민이 아닌가 보다.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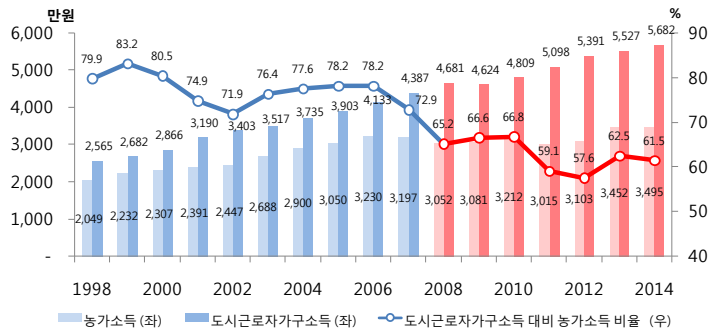
자료: e-나라지표

7 농가소득

농가 소득 비율도 줄어듦고... 새누리당은 마이너스의 손인가.

실질임금 증가율은 반의 반토막, 최저임금 증가율은 2/3토막. 그리고 도시소득 대비 농가 소득 비율도 2007년 72.9%에서 2014년 61.5%로 10%p 하락.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국민의 소득과 관련된 비율들은 하나같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새누리당 정부는 국민 주머니에 관하여 진정 '마이너스의 손'이다.

도시소득 대비 농가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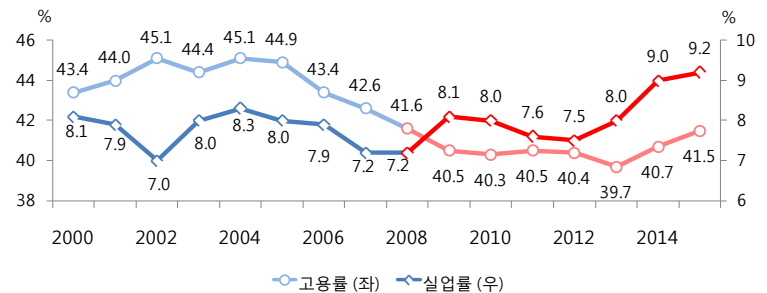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 도시가구소득은 2인 이상의 명목소득으로 함

8 청년일자리

청년 일자리, 고용률은 줄고 실업률은 늘어

새누리당에게 청춘은 '아프게 해야 청춘'인가 보다. 그 아프게 하는 방법도 '일 못하게 해서'가 아닐까. 새누리당 8년, 청년의 실업률은 9%를 넘고(2016.1월 9.5%), 고용률은 40% 이하로 내려갔다가 조금씩 복구하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도 "경제 못했다!"고 비난한 민주정부에 비해서 여전히 낮다. 1%를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청년 인구가 약 1,000만 명이다. 고용률, 실업률 1%면 10만 명의 청춘이 일자리가 없어 너무 아프다.

청년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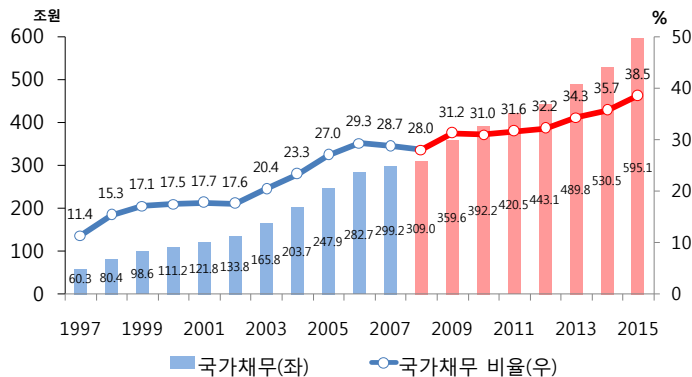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

1 국가채무

나라 빚은 아~몰랑 나라살림 이렇게 해도 되나?

정부수립 이후 2007년까지 59년간 진 한국의 국가부채 총액은 299조원이었다. 새누리당 정부 8년이 지난 지금 나랏빚은 595조원으로 두 배가 늘었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30%를 훌쩍 넘겨 40%에 육박하고 있다. 8년간 59년 만큼의 빚을 '압축적으로' 진 것이다.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이제 1,155만원의 나라 빚을 지고 태어난다. 국가의 부채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한다. 새누리당 정권에게 국민의 빚은 남의 빚인가?

국가 채무 규모와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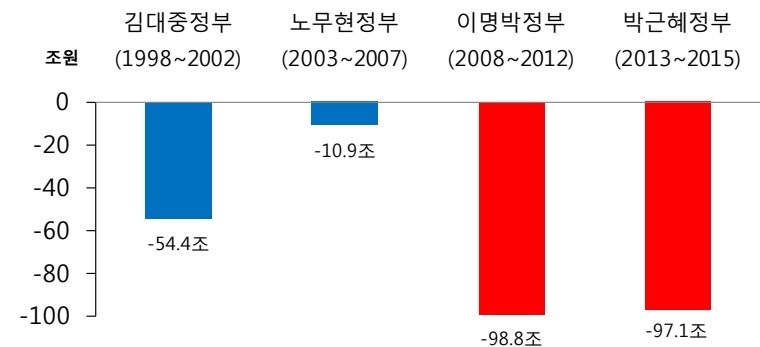
자료: e-나라지표,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6」 (국회예산정책처)

2 재정수지

나라 살림 무능하니 나라 빚만 쌓이네.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시절 IMF로 나라를 거덜내고 '먹튀'한 이후, 김대중 정부는 빚도 갚고 IT 붐을 일으키면서도 50조원 정도의 적자로 막았다. 2002년 카드 위기 이후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2007년에는 드디어 나라 살림 흑자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는 흑자로 돌아선 살림을 '과감히?' 다시 적자로 돌려놓아 5년간 마이너스 100조원을 쌓았다. 박근혜 정부는 3년만에 이명박 정부 5년 성적을 달성하고 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정부별 관리재정수지 누적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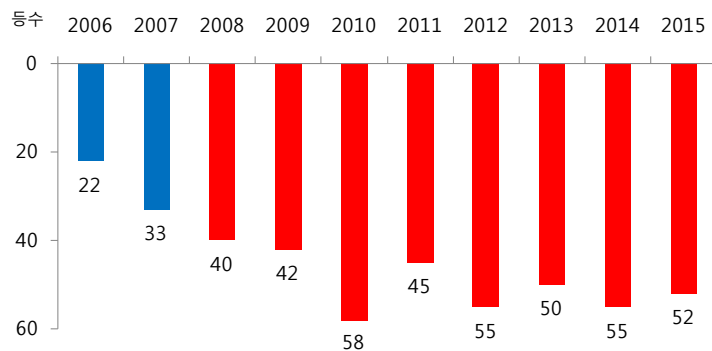
자료: e-나라지표, 「월간 재정동향」 2016년 2월호(기획재정부)

3 정부채무순위

등수는 떨어지는데, 아직도 ‘뭐가 괜찮다고?’

새누리당 정부에서 정부 빚을 걱정하면 박근혜 정부는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하지만 140개국 중 20등~30등 하던 나라 살림 순위가 새누리당 8년을 거치면서 50등 바깥으로 밀려났다. 일을 못하면 인정이라도 해야지, 걱정하는 사람들을 면박 주는 박근혜 정부. 적반하장이란 이럴 때 쓰는 말.

정부 채무 국제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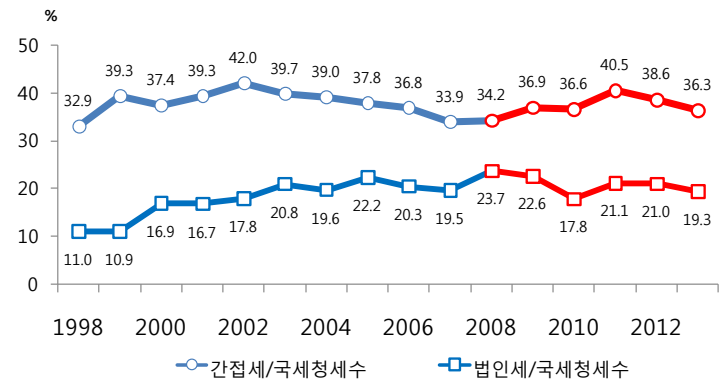
자료: WEF,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각년도
주: 비교대상국가 2015년 기준 140개 국가임

4 조세

재벌 세금은 깎아주고, 간접세는 그대로

나라 살림에는 돈이 든다. 그 돈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개인과 기업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민주정부 10년은 돈 잘 버는 기업들에게 세부담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간접세는 가급적 줄였다. 그러나 새누리당 8년, 법인세 비중은 줄어두고 간접세 비중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줄어든 법인세 만큼을 나라 빚으로 메꾸고 있다. 그 빚은 언젠가 국민이 갚아야 하는데, 국민이 봉인가?

국세청세수 세원별 구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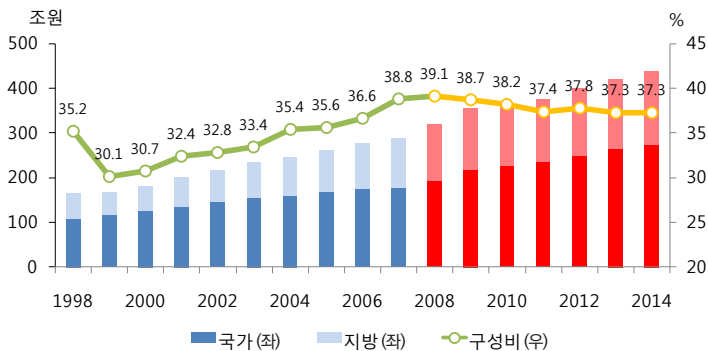
자료: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

5 지방재정

생색은 대통령이,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가 좋아질수록 지방정부는 돈이 더 든다. 대통령이 복지 확대를 공약했으면, 그 만큼 돈을 더 배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 누리과정'을 공약했으니, 그 돈을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 줘야 하는 것. 새누리당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예산 비중을 줄이고 있다. 39%에 달했던 비중이 이제 37% 초반으로 내려왔다. 그러면서 대통령 자기 '공약'은 이행하라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몰아댄다.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돈은 안주면서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꼴이다. 이 일을 어찌 하나?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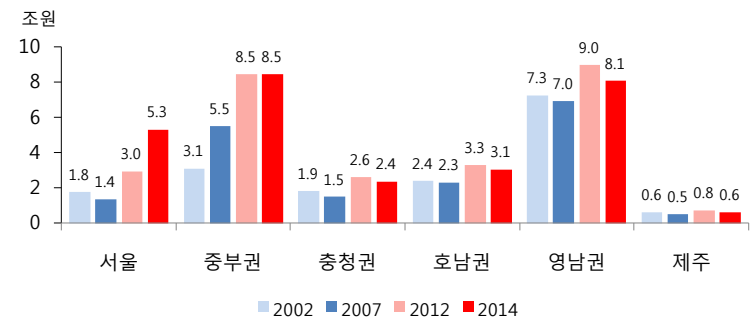
자료: e-나라지표

6 지방자치단체 채무

어찌 하긴... 지방자치단체가 빚 내라는 소리지.

지방자치단체에 돈은 덜 주면서 대통령 공약은 지키라고 욕박지르면 별 수 없다. 빚 내서 매꿔야 한다. 새누리당이 집권한 2008년부터 제주와 영남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50% 이상 빚이 늘었다. 물론 영남권과 제주도 빚은 늘었다. 다른 지역만큼 심하게 늘지 않았을 뿐이다. 빚 권하는 새누리당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살림까지 빚을 권하고 있다.

정부별 지역 채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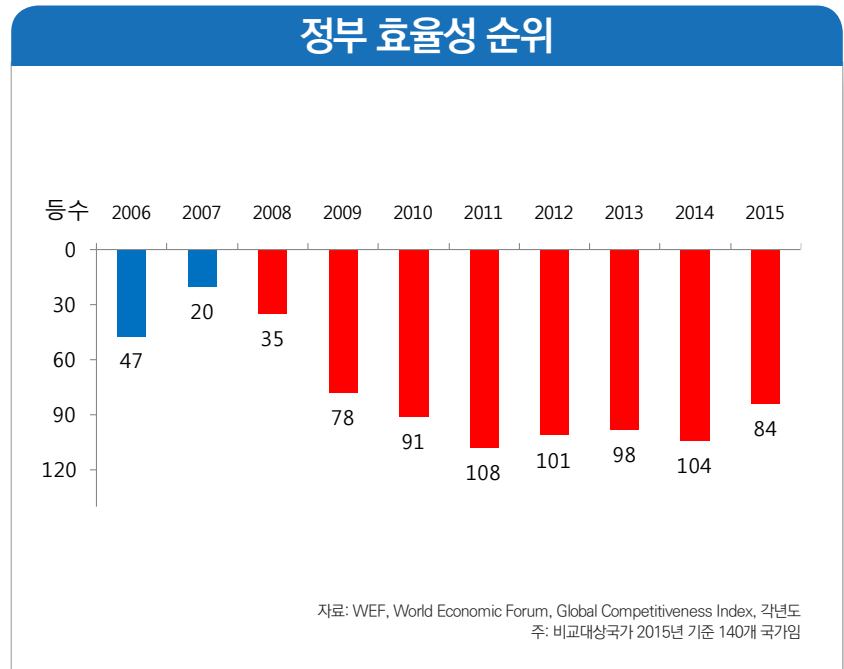


자료: e-나라지표
주: 중부권(인천/경기/강원), 충청권(세종/대전/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제주

7 정부 효율성 순위

무능하고 무책임한 새누리당 정부, 효율성도 떨어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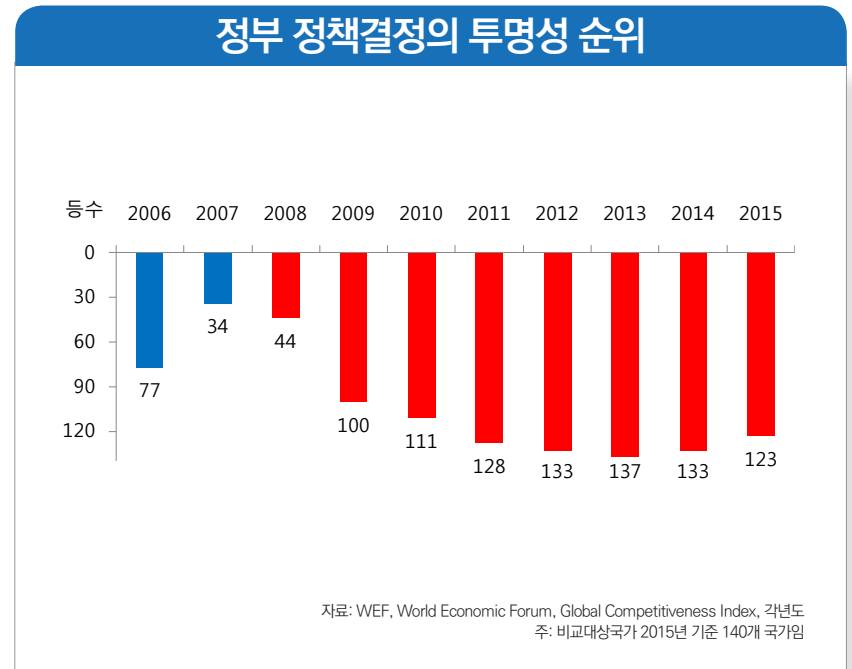
새누리당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재벌에게 세금 크게 깎아주면서 구멍 난 나라 살림은 빚으로 메꾸고 있음은 앞에서 익히 보았다. 어쨌든, 살림이 구멍 나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더 효율적으로 돈 쓰는 것이 인지상정. 그런데 새누리당 정부들은 얼마나 일을 방만하게 벌이고 제대로 못하는지, 정부의 효율성 순위가 열등생으로 떨어졌다. 2007년만 해도 세계에서 20등 하던 정부 효율성이 100등 안팎으로 나가 떨어졌으니,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8 정부 투명성 순위

문고리가 판치는 정부, 누가 정책을 결정하는 거지?

누가,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는지 보아야 잘못된 정부 운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에 누가 정책을 결정하는지 알 수가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고리'가 유행어가 되었다. 한국 정부의 정책결정 투명성 순위는 2007년 34위에서 2015년 123위로 수직 낙하였다. 8년 만에 이 정도 떨어지기도 정말 어려운 일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불투명한 정부의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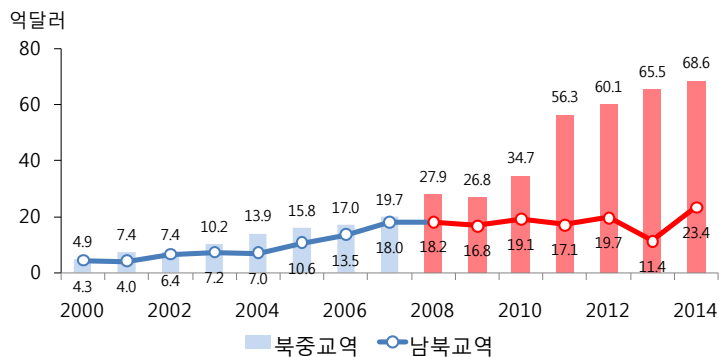


1 남북 - 북중 교역

한국 빠진 북방경제, 중국은 대박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이라 했다. 말만 있고 실천이 따르지 않을 뿐이지, 북방경제, 평화경제는 한국의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한 지렛대임을 심지어 새누리당도 알고 있다. 그러나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18억 달러에 달했던 남북교역은 이후 정체되었다. 남북교역이 정체된 곳에 중국이 대박을 내고 있다. 2007년 비슷했던 한국과 중국의 대북 교역액 규모가 이제 3배 차이가 난다. 이제 개성공단도 문을 닫았다. 새누리당 정권하에서 한국인은 불안에 떨고 중국인은 돈을 번다.

남북교역 - 북중교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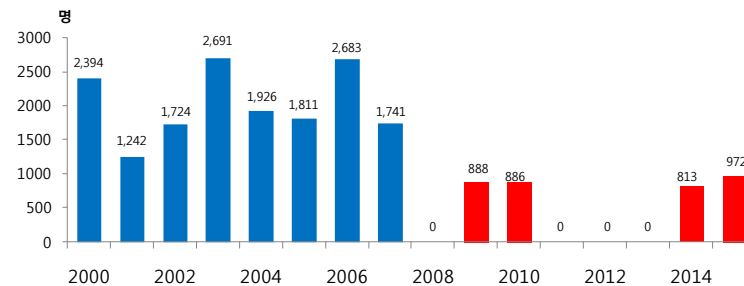
자료: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

2 남북간 인도적 교류

이렇게 막아 놓고 웬 통일 대박?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군사적으로 긴장이 고조되어도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고리로 남북대화를 다시 이끌어내고 교류협력을 재개했다. 그래서 이산가족상봉은 인도적인 동시에 정치적이며 경제적이다.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는 동쪽의 금강산을 막았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서쪽의 개성공단마저 끝장냈다. 하지만 이미 이산가족상봉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 경제뿐 아니라 인도적 교류도 막아놓고 무슨 통일 대박인가.

남북이산가족 직접상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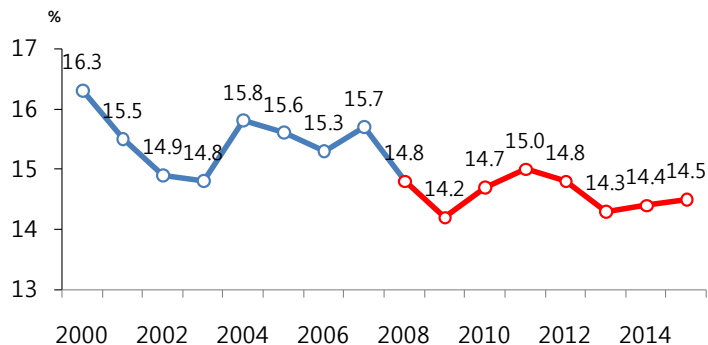
자료: e-나라지표

3 평화 안보

새누리가 안보정당? 국방비 비중도 줄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남북대화와 경제협력을 추진하면, 새누리당은 '안보'를 강조하며 북한을 혼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천안함 때도, 연평도 때도 성명만 단호하더니, 핵실험 한다고 엄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협력업체만 망가뜨릴 줄 알았지 무슨 안보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심지어 민주정부 10년간 15%대를 유지했던 예산대비 국방비 비중도 이제 14%대로 내려왔다. 평화경제를 망치면서 안보도 말로만 때우는 새누리당, 평화를 말길 수 있을까?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중 추이



자료: e-나라지표

제2부 더불어 성장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답이다.

더불어 성장론 정의와 풍요가 함께 하는 더불어 성장

청년경제 활성화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차별과 불안이 없는 직장 만들기

자영업 활성화 열심히 일하고 공정하게 대우받기

서민경제 활성화 서민도 살만한 나라를 위해

여성경제 활성화 여성을 마음껏 일하게 하라

미래산업 선점 오늘 준비해야 미래를 선점한다

혁신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이 미래의 희망이다

대·중소기업 균형 발전 조화로운 기업 생태계를 위해

제2차 국토균형발전 모든 지역이 더불어 잘사는 상생 발전

한반도 신경제지도 평화가 밥이다

도농 상생 도시를 건강하게, 농촌을 풍요롭게

1

더불어 성장론

‘더불어 성장론’의 정의

- ‘더불어 성장론’은 분배나, 성장이나의 이분법을 넘어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이며,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성장전략
 - ‘더불어 성장’은 ‘분배를 통한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 및 지역 간, 계층 간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장모델
- ‘더불어 성장론’은 저성장 시대에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성장전략

더불어 성장론의 역사적 의미

- ‘더불어 성장’은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경제노선
- ‘더불어 성장’은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의 연장선
- ‘더불어 성장’은 분배구조개선을 통해 성장을 추구했던 ‘소득주도 성장’론의 연장선
- ‘더불어 성장’은 ‘낙수효과’의 비현실성을 비판하고 ‘분수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모델을 추구했던 ‘분수경제’의 연장선

더불어 성장론의 국제적 의미

- 불평등 해소를 통한 성장은 국제적 합의
 - 전 세계적으로 경제민주화가 없다면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에 도달, 다시 말해서 불평등해소는 단순히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인식이 대세가 됨
- ‘더불어 성장’은 국제적 합의인 ‘포용적 성장’에 기반 한 한국적 성장모델
 - 세계의 석학 및 국제기구, 그리고 선진국의 싱크탱크들은 새로운 성장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 등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더불어 성장의 핵심 축: 공정경제, 선도경제, 네트워크경제

- ‘더불어 성장’은 공정·선도·네트워크경제의 세 축을 통해 더불어 발전을 추구
 - ‘더불어 성장’은 공정경제를 통해 ‘분배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고, 선도경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기업 간 협력을 모색하며, 네트워크경제를 통해 지역 간 계층 간 상생을 추구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모델
- 공정경제를 통해 내수확대, 선도경제를 통해 수출증대, 네트워크경제를 통해 상생적 발전을 추구

더불어 성장의 정책기조: ‘불평등 해소를 통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통한 성장’

- 불평등해소를 통한 성장은 전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 사회정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내수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의미함
- 균형발전을 통한 성장은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산업 간, 기업 간,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

더불어 성장의 정책목표

더불어 성장	정책기조	정책목표
	불평등 해소를 통한 성장	청년경제 활성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
		자영업 활성화
		서민경제 활성화
		여성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을 통한 성장	미래산업 선점
		혁신 중소기업 육성
		대·중소기업 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한반도 신경제지도
		도농상생

2

청년경제 활성화

청년일자리 70만개,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청년세 도입

현황

- 2015년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2%로, 11.3%였던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체감 실업률은 20% 이상
 - 올 1월 청년실업률은 9.5%로 점점 악화되고 있음
- 전국 1인 가구 청년 주거빈곤 인구는 2010년 기준 139만명(15%), 서울은 12.4만명(36.3%), 반지하를 포함(4.8만)할 경우 2014년 기준 서울 청년 1인 주거빈곤 가구 17만명 추정
 - 2012년 기준 서울 청년 1인가구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가구비율 69.9%
- 학자금 대출액은 2010년 3조7,000억원에서 2014년 10조7,000억원으로 3배 증가
 - 대출금 갚지 못해 가압류등 법적 조치 받은 졸업자수는 2009년 649명에서 2014년 6,552명으로 10배 이상, 연체금액은 2009년 36억원에서 453억원으로 12배 이상, 최근 3년간 신용불량자 5,000명

목표

-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고용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고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보장함
- 대학생에게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제공하고, 졸업생에게는 상환부담을 덜어주어 부채부담 해소

대책

- 공공부문 35만, 민간부문 37만 등 신규 청년일자리 72만개 창출
 - 공무원 17.1만,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13.5만 신규 증원 및 신재생에너지, 농업직불금 등 지속가능관련 고용창출 4.2만 등을 통해 공공부문 35만 신규 일자리 창출
 - 청년고용할당제, 노동시간단축 등으로 민간부문 고용창출 37만

- 국민연금을 활용한 자원 10조원으로 다세대·다가구(1가구 3실 기준, 1가구 2억 원가정)를 매입하여, 1인 기준 월세 30만원 이하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을 준비하여 15만 청년층에게 제공함
- 청년부채 해소 방안의 하나로 학자금 대출의 조건부 무이자 전환
- 지속가능한 청년자원 확보를 위해 '청년세' 도입
 - 2014년 기준, 연 1조 6,784억원 수준의 청년 자원 확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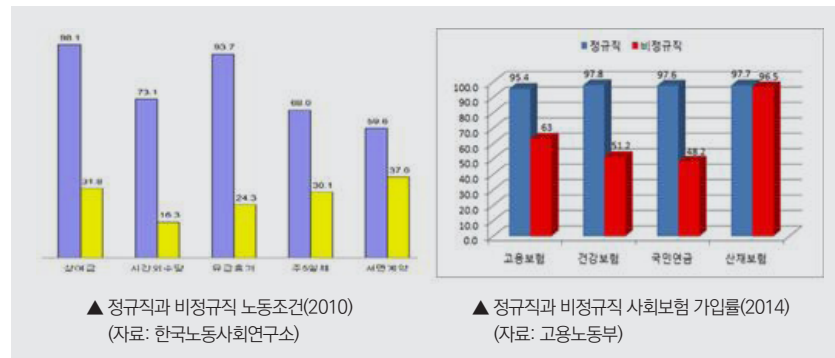
3

비정규직 차별철폐

3동원칙(동일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 도입,
사유제한제 도입, 비정규직 구직수당제 도입, 알바권리보장

현황

- 정규직 대비 2/3수준의 시간당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로 차별이 심함



- 2014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11,463원으로 정규직 18,426원의 62.2% 수준임
- 또한 비정규직은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노동조건과 4대사회보험 가입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음

목표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와 동일임금 보장으로 경제정의 실현, 내수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함

대책

-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3동 원칙(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도입
 - '근로기준법'의 차별 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여 비정규직을(파견 및 하도급 포함) 차별할 수 없도록 함

- 비정규직 사유제한제의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 비정규직 구직수당제 도입
 -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비정규직을 해고할 때 사용자는 퇴직금과 별도로 재직 기간 지급했던 총 임금의 10%를 구직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함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업급여 지급 기준인 180일 이하 재직한 비정규직 해고시, 사용자가 5%, 고용보험이 5%의 구직 수당을 지급함
- 알바권리보장 5종 세트
 - 시간제 근로자 권리장전 제정 및 의무 게시
 - 근로계약서 공공기관 제출 및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노동 시간 및 시간당 임금 등이 명시된 급여명세서 의무 발급, 2013년 9월 은수미 의원이 발의)
 - 각 광역별로 권리 침해 사례 신고/ 무료 상담/ 법률지원 콜센터 설치
 - 근로감독관 증원과 명예근로감독관 선임 등 근로감독체계 내실화
 - 악덕 고용주 3진 아웃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박근혜 대통령은 차액의 10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약)

4

자영업 활성화

자영업자 영업권 10년 보장 및 재건축시 우선임차권 보장, 가맹업 이익공유제 법제화

현황

-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
 -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와 불공정 경쟁에 의해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음
 - 계약서에서나 등장하는 갑을관계가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말이 된 것은 불공정 경쟁의 관행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음
- 자영업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경쟁 관행은 심각할 뿐 아니라 광범위함
 - 자영업의 문제는 재래상권 및 골목상권의 문제, 가맹점(대리점)문제, 소공인 문제, 갑을 문제 등 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 광범위함

목표

- 자유롭고 공정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자영업자 소득 보장
- 다양한 자영업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

대책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보장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재건축 시 우선임차권은 보장
 - ※ 현재 우리당 서영교 의원이 같은 취지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중
-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이익공유제 법제화
 -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및 거래관계 요구나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을 방지하여, 가맹사업의 상생모형을 마련할 것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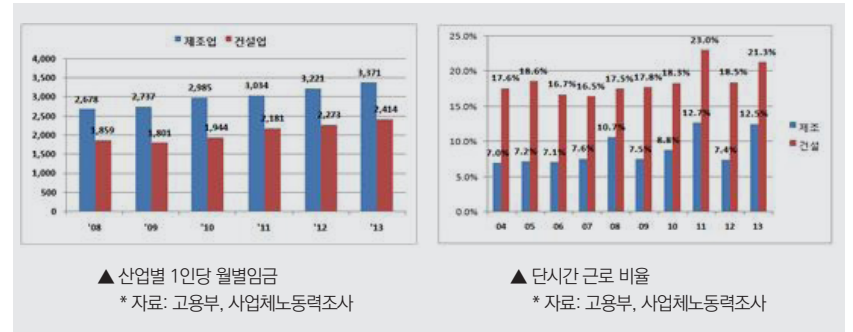
서민경제 활성화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확대, 적정임금제 ·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서민금융을 위한 10%대 우체국 신용대출 신설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확대, 적정임금제·임금분포공시제 도입]

현황

- 최저임금은 임금계약의 기본선이며,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소득보장의 주요 제도임
 -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며, 월209시간 기준 월급 1,260,270원이며, 2015년 8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 평균취업시간인 주 20.1시간 기준 주급 121,203원임
- 우리 경제의 직업 및 직종, 직급 등에 따른 임금격차는 작지 않은 수준이며 여전히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건설노동자는 제조업에 비해 임금이 낮고, 단시간 근로 비율(21.3%)이 높아, 적정 수준의 임금과 일감 보장이 필요함
 -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4년 30대그룹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6,999만 원으로 임원과 직원 사이의 평균연봉 차이는 10.8배



출처: 관계부처합동, 「제3차(15~19)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2015.8.4.

목표

-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확대, 적정임금 및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으로 노동시장을 통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 기반 구축

대책

- 임금계약 기본선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생활임금을 확대하여 상시고용근로자의 최저생활수준 보장하며, 적정임금 도입으로 일용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함

[서민금융을 위한 10%대 우체국 신용대출 신설]

현황

- 현재 우체국은 예금 및 보험 기능이 있으며, 대출은 보험과 연계되어 제공하고 있으나, 이외의 대출을 통한 수익 창출 구조가 없음
 - 2014년 우체국예금 수신고 현황은 60조 1,308억원, 보험총자산은 47조 7,170억원임(우정사업본부, 「2014년 연차보고서」)
 - 우체국예금보험의 자산운용은 간접투자를 기본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모든 주식 투자와 일부 채권 투자를 위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주식형 펀드 투자, 벤처캐피탈 펀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우체국예금보험은 국가가 전액 지급보장을 하고 있음
- 현재 중·저신용 서민들은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로 인해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따라서 우체국예금보험의 여유자금을 서민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목표

- 우체국예금보험의 여유자금을 저신용 가계대출에 활용하여 고금리로 인한 중·저신용 서민들의 가계부담 완화

대책

- 10%대 대출금리로 중·저신용가계에 우체국 신용대출 신설(2천만원 한도, 한도는 추후 확대 가능)
 - 10%대 신용대출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안정적 대출로 전환가능
 - 저신용 가계의 낮은 신용은 보증보험을 통해 보강

여성경제 활성화 | 여성을 마음껏 일하게 하라

6

여성경제 활성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남성배우자 출산휴가기간 확대, 재취업 여성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칼퇴근법" 제정

현황

-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임
 - 2001년부터 15년째 초저출산(합계출산률 1.3명 이하)
-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은 OECD 최하위 수준임
 - 평균 임금수준도 여성은 남성의 68% 밖에 되지 않음
- 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30대 여성고용률이 50.4%로 40~50대 여성고용률 60%대보다 낮은 상황임.

목표

- 여성이堂堂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여성 일자리 확대로 여성취업 걱정 해소

대책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현재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변경함
-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변경함
- 재취업 여성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 2015년 7월 147개에서 2019년 200개를 목표로 하여, 경력단절여성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취업훈련프로그램도 개발 및 확대 운영함
- "칼퇴근 법" 으로 "저녁과 주말"을 가족과 함께
 -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 법정화
 -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한도 적용
 -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 등

7

미래산업의 선점

핵심 신산업분야 집중 육성,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

현황 : 4대 신산업·혁신 산업 선정

- 핵심 신산업·혁신분야로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발표한 1) 항공·우주산업, 2) 제약·의료 산업, 3) IoT·소프트웨어산업, 4) 친환경·재생에너지산업은 1) 부가가치측면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2)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며 3) 관련 산업부문도 넓어 여타 산업부문과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임
- 이들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하이테크 산업’으로 불리는 ‘R&D 집약적 산업’이라는 것임. 따라서 R&D를 통한 기술개발 없이는 경쟁력 우위를 선점할 수 없는 산업부문임

목표 : 혁신 신산업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

- 하이테크 산업 부문의 R&D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 흑자 확대 및 적자 극복
-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최하위인 현재 1.0%를 10년 내에 OECD 평균(2013년 OECD 평균은 9.0%) 수준으로 높임

대책

- 정부의 R&D 지원 확대와 효율성 제고 : 정부·공공재원 연구개발비 수준을 2020년까지 전체 R&D의 30% 이상으로 높임
 - 핵심 신산업·혁신분야로 선정된 4대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기존에 배정한 연구개발 예산을 2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지원책을 대폭 강화하겠음
- 각 부처 및 연구기관 별로 분산된 연구개발 과제 및 재원의 통합적 관리와 공유를 위한 ‘과학기술부총리’신설
 - ‘과학기술부총리’를 도입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80%를 차지하는 주요 5개 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 33개 중앙부처의 연구개발 사업의 조정·관리를 강화하겠음

8

혁신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기술·경영연구소’ 및 ‘중소기업 R&D 특별회계’ 도입

현황

- 우리나라의 수출은 세계 6위까지 상승(2015년 추정치)했으나 국내에서의 생산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그나마 대기업 중심으로 한 생산과 수출만이 활발하고 중소기업의 생산 참여는 줄고 있는 실정임.
- 중소기업의 생산 참여를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데 이는 R&D를 통한 기술 및 생산성 향상이 正道이면서 王道가 될 것임

목표

- 중소기업에 대한 R&D 집중투자를 통한 국내 제조업 활성화

대책

- 중소기업의 R&D 기능 제고를 통한 혁신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경영연구소’ 및 ‘중소기업 R&D 특별회계’를 도입하여 혁신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
 - ‘R&D 특별회계’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국책연구소-‘중소기업 기술·경영연구소’ 간 직접적 연결을 통한 공동 연구를 지원함.

9

대·중소기업 균형발전

순환출자구조 개선,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 법제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현황

- 재벌대기업들의 순환출자를 통한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전근대적 소유와 경영을 가능하게 하여, 해당 기업의 위기요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음
- 대기업의 문어발식 무차별 사업 확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유 업종이라 할 수 있는 도매·소매 유통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문구업 등 골목상점, 재래상권을 침해하고 있음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거래에서 협상력의 격차로 인해 불공정거래, 부당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음

목표

- 순환출자 개선으로 재벌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전근대적인 소유경영 행태를 개선하여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고,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함

대책

- 편법적인 지분소유에 따른 의결권 제한으로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추진
 - 순환출자 개선 관련 법 개정후 유예기간 5년을 두고 순환출자가 해소될 때까지 보유 주식의 20%씩 매년 의결권 제한
 - 우회출자, 비금융회사의 금융계열사 소유 지분, 계열 공익법인의 계열사 소유 지분 등에 대한 의결권 제한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거래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맹점법, 대규모유통거래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포함
- 영세자영업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담합금지규정에서 자영업자 예외 인정
- 생계형 서비스업부터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우선 실시

10

제2차 국토균형발전

지역특화 국가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집중지원,
국토균형발전 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토균형발전차관 신설

현황

- 지역 간 발전 및 고령화 격차의 심화
- 중앙주도의 획일적 지방정책 및 정책조정 기능 한계

목표

- 지역 특성에 맞춘 미래먹거리 산업유치를 통해 제2차 국토균형발전 실현
 - 국민 전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향식 지역발전모델 구축 및 지역에 특화된 경쟁력 높은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구축

대책

- 지역 특화 국가전략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집중지원
 - 국가전략산업특구의 성패는 기업 유치에 있으므로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의 파격적 혜택과 함께 공공부문 연구개발비 확대 지원
- 기존 관련기구보다 위상이 강화된 '국토균형발전 시·도지사협의회' 설립
 - 이를 통해, 지역정책 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조정·의견 수렴의 제도적 절차를 운용하여 상향식 지역정책을 추진
- 국무조정실에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전담하는 '국토균형차관' 신설

11

한반도 신경제지도

남북경협을 통한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

현황

- 최근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증가로 위기감이 고조됨
 - 북핵위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낳음
- 북한은 정치·군사적 위협요소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기회요소
 - 5.24조치 이후 중국만이 북한의 교역의존도를 높이고 경제협력과 공동개발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상생발전 기회를 놓치고 있음

목표

- 평화·공영 체제 확립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
 -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과 대륙, 태평양으로 확장하여 우리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대책

- 경제활동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하기 위해, 환황해 경제권과 환동해 경제권을 동시에 발전시킴
 - 남북 간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면 2050년까지 연평균 0.8% 추가성장과 매년 5만개 일자리 신규 창출이 가능함.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더해 동북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잠재성장률을 5%까 지상승시킬 수 있음
 - 새만금과 개성공단을 핵심산업단지로 개발하는 환황해 경제권의 활성화와 더불어, 에너지산업과 수산업을 발전시켜 평화, 환경, 문화의 중심이 되는 환동해 경제권 성장을 동시에 진행함
- 남북경제협력 강화
 -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복원 등 남북경제협력을 지원함
- 평화지역(접경지역) 발전법 추진
 - 휴전선 10개 접경지역(경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 인천시 강화군·옹진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발전법 추진

12

도농상생

건강한 도시와 풍요로운 농촌을 위한 푸드플랜 전국 확대

현황

- 우리 국민은 안전하지 않은 먹거리 환경에 놓여 있음
 - 학교급식조차 수입농산물, 가공식품이 제공되는 열악한 먹거리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 도시가게 식료품지출 부담은 늘어났으나, 오히려 농가소득은 더욱 팍팍해짐
 -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구와 격차가 계속 벌어져 2014년 기준 62% 수준으로 열악해졌으며, 소득 불안정성이 높아 농민생활이 더욱 힘든 상황임

목표

- 도시를 건강하게 농촌을 풍요롭게 하는, 도농상생 체계를 구축
 - 지역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체계를 정비하고, 신선한 농산물에 대한 도시민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을 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함
 - 농촌 중소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을 낮추고 농촌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농산물 공급에 대한 안정적 수요층을 도시에서 확보함

대책

- 국가 먹거리 총괄계획으로 푸드플랜을 수립함
 - 먹거리 정책을 기존 개별적 관리에서 로컬푸드 생산, 유통, 식품업소 점검 등 통합적 관리로 변환하고, 먹거리 영역을 식품공급에서 건강, 환경, 경제, 공동체, 문화 등까지 확장시켜 국가 총괄계획으로서 푸드플랜을 수립함
- 공공기관 전제로 급식을 확대하고, 학교급식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확대